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10. 8

CONTENTS

〈요약〉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결론

도민 인권의식 조사 및 인권정책의 방향제시

고승희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연구위원, kosh@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21조 제2항에 의거 도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하고 도의 인권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맞춤형 인권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요약

- 본 연구는 2013년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 충남도민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인권의식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인권증진과 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와 충남도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시사점들이 도출되어짐
- 성별, 나이, 학력, 지역에 의한 차별경험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지속적이며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상기관과 단체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함
- 충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확대와 정책개발이 필요시 됨

1. 추진방향

-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21조 제2항에 의거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
- 도의 인권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맞춤형 인권정책 개발에 활용

2. 조사범위

- 조사기간 : 2015년 7월 27일 ~ 2015년 8월 21일
- 조사대상 : 충청남도 각 시·군 주민

3.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대면조사

4. 조사내용

- 충청남도의 인권존중
-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및 행정
-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권의식/평가

5. 조사분석

- 수집된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본집단의 전체결과를 도출

조사결과 분석 ◀

02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1) 성별

– 여성 485명(49.4%), 남성 497명(50.6%)으로 남성의 응답자가 다소 많음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	485	49.4
남성	497	50.6
총합계	9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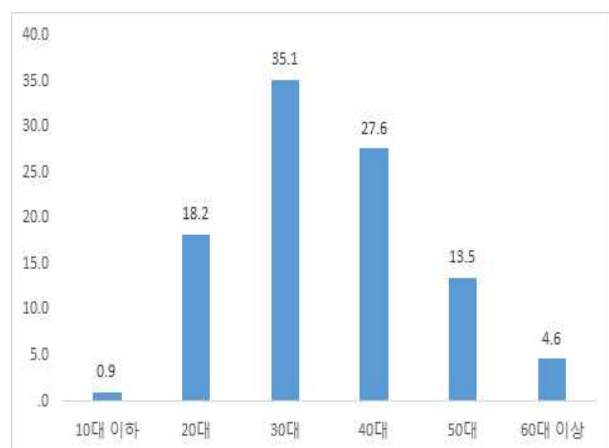


2) 연령

– 30대 342명(35.1%), 40대 269명(27.6%), 20대 177명(18.2%), 50대 131명(13.5%), 60대 이상 45명(4.6%), 10대 이하 9명(0.9%)순임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10대 이하	9	0.9
20대	177	18.2
30대	342	35.1
40대	269	27.6
50대	131	13.5
60대 이상	45	4.6
총합계	9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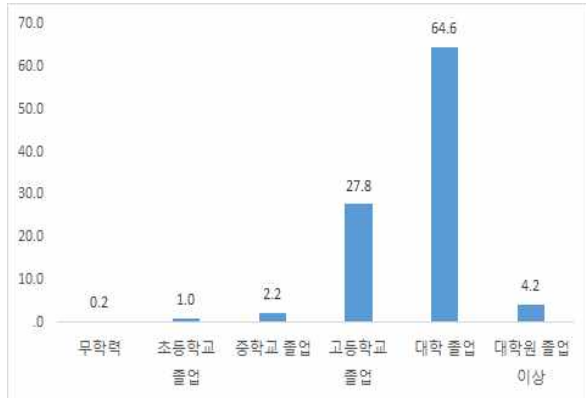


3) 최종학력

-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 630명(64.6%)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71명(27.8%), 대학원 졸업 이상 41명(4.2%), 중학교 졸업 21명(2.2%), 초등학교 졸업 10명(1.0%), 무학력 2명(0.2%)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무학력	2	0.2
초등학교 졸업	10	1.0
중학교 졸업	21	2.2
고등학교 졸업	271	27.8
대학 졸업	630	64.6
대학원 졸업 이상	41	4.2
총합계	9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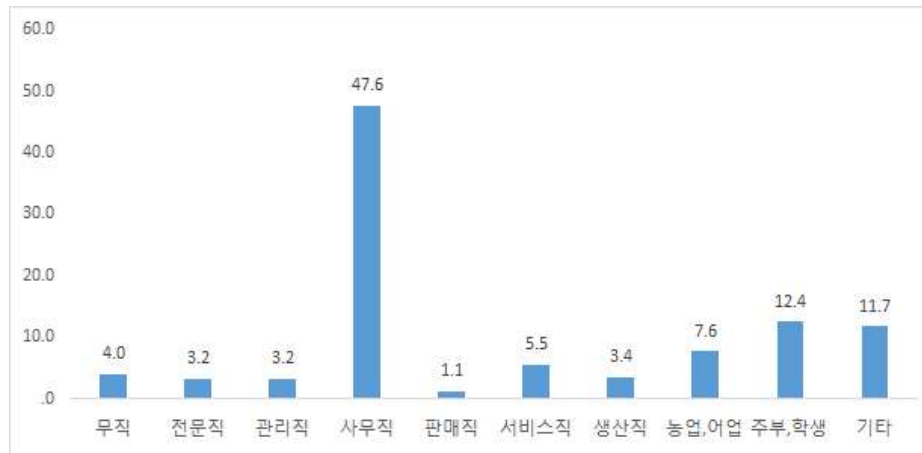


4) 직업

- 직업은 사무직 456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학생 119명(12.4%), 기타 112명(11.7%), 농업·어업 73명(7.6%), 서비스직 53명(5.5%)순임
- 기타에 응답한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요원, 환경미화원, 군인, 공무원, 자원 봉사, 자영업, 시민단체활동가, 기간제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임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무직	38	4.0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	31	3.2
관리직 (기업체 간부, 고위공무원 등)	31	3.2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456	47.6
판매직(영업사원, 회사홍보사원 등)	11	1.1
서비스직(가게주인, 음식점 주인 등)	53	5.5
생산직(공장근로자, 단순노동자 등)	33	3.4
농업, 어업	73	7.6
주부, 학생	119	12.4
기타	112	11.7
총합계	9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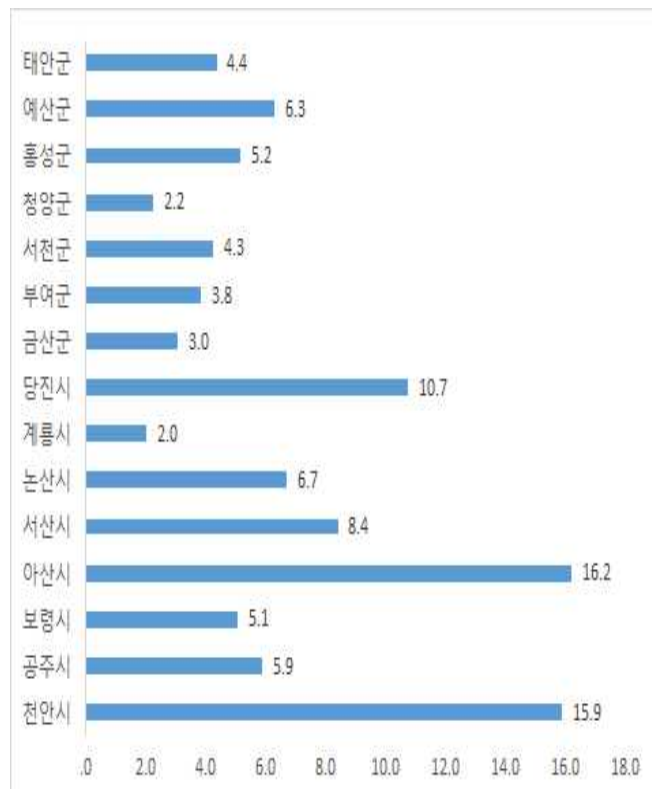


5) 지역

- 응답자의 주거 지역은 아산시 160명(16.2%), 천안시 157명(15.9%), 당진시 106명(10.7%), 서산시 83명(8.4%), 논산시 66명(6.7%), 예산군 62명(6.3%), 공주시 58명(5.9%), 홍성군 51명(5.2%), 보령시 50명(5.1%), 태안군 43명(4.4%), 서천군 42명(4.3%), 부여군 38명(3.8%), 금산군 30명(3.0%), 청양군 22명(2.2%), 계룡시 20명(2.0%)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천안시	157	15.9
공주시	58	5.9
보령시	50	5.1
아산시	160	16.2
서산시	83	8.4
논산시	66	6.7
계룡시	20	2.0
당진시	106	10.7
금산군	30	3.0
부여군	38	3.8
서천군	42	4.3
청양군	22	2.2
홍성군	51	5.2
예산군	62	6.3
태안군	43	4.4
총합계	988	100.0



2. 충청남도의 인권존중

1) 충청남도에서 인권의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 1순위로 경제적 지위 313명(32%), 출신국가 195명(20%), 출신지역 112명(11.5%), 학력/학벌 98명(10.0%), 성별 72명(7.4%) 순으로 응답함
- 2순위로 경제적 지위 191명(20.6%), 학력/학벌 149명(16.1%), 장애 101명(10.9%), 성별 89명(9.6%), 용모 87명(9.4%)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침해자의 인성부족, 인권교육과 현재 실태간의 괴리, 직급상하관계, 학연, 가치관, 시민의식, 도덕, 인간존엄성인식부족,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지 부족, 사회적 지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출신국가(인종, 피부색)	195	20.0	59	6.4
성별(임신, 출산 포함)	72	7.4	89	9.6
경제적 지위(직업소득)	313	32.0	191	20.6
나이	26	2.7	33	3.6
종교	12	1.2	21	2.3
용모(외모, 키, 몸무게 등)	39	4.0	87	9.4
학력/학벌	98	10.0	149	16.1
성적지향(동성애 등)	3	0.3	16	1.7
장애	66	6.8	101	10.9
출신지역	112	11.5	87	9.4
혼인상태(이혼, 미혼 등)	2	0.2	19	2.0
질병(에이스, 한센병, B형간염 등)	5	0.5	25	2.7
정치적 입장(사상, 이념 포함)	30	3.1	46	5.0
기타	4	0.4	5	0.5
총합계	977	100.0	9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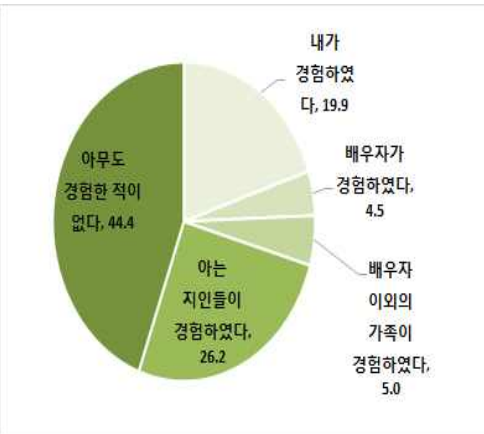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 살면서 차별 경험 유무

①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24명(44.4%),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0명(26.2%), 내가 경험하였다 190명(19.9%),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8명(5.0%),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43명(4.5%)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190	19.9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43	4.5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8	5.0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0	26.2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24	44.4
총합계	9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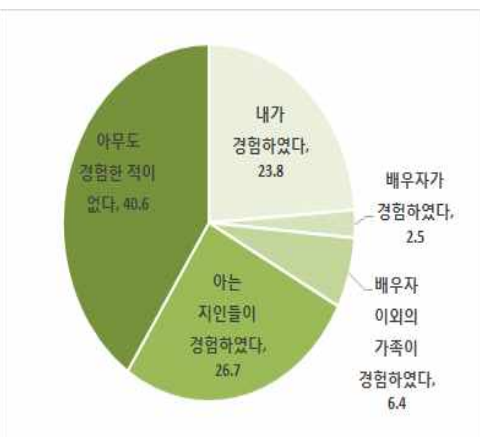


②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388명(40.6%),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5명(26.7%), 내가 경험하였다 228명(23.8%),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61명(6.4%),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24명(2.5%)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228	23.8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24	2.5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61	6.4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5	26.7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388	40.6
총합계	9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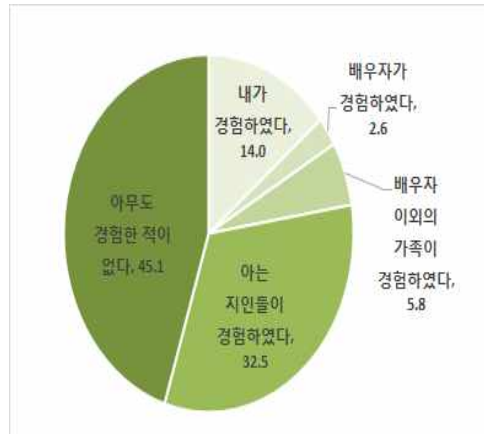


③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차별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30명(45.1%),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310명(32.5%), 내가 경험하였다 134명(14.0%),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55명(5.8%),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25명(2.6%)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134	14.0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25	2.6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55	5.8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310	32.5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30	45.1
총합계	954	100.0



④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16명(43.8%),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323명(34.0%), 내가 경험하였다 117명(12.3%),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60명(6.3%),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33명(3.5%)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117	12.3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33	3.5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60	6.3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323	34.0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16	43.8
총합계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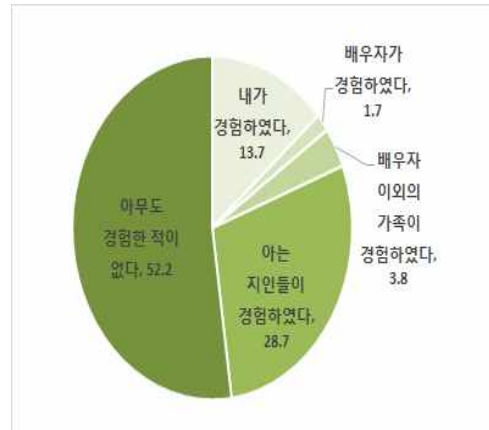


⑤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97명(52.2%),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73명(28.7%), 내가 경험하였다 130명(13.7%),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36명(3.8%),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6명(1.7%)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130	13.7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6	1.7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36	3.8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73	28.7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497	52.2
총합계	9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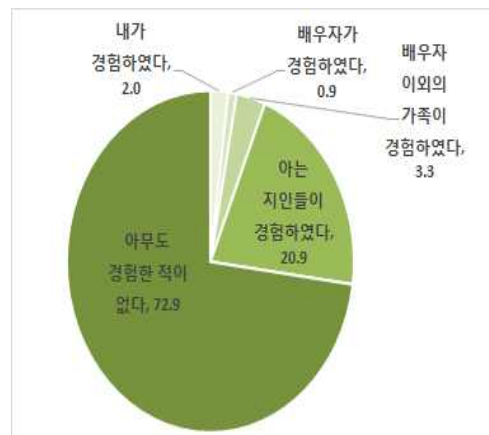


⑥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정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693명(72.9%),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99명(20.9%),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31명(3.3%), 내가 경험하였다 19명(2.0%),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9명(0.9%)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19	2.0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9	0.9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31	3.3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99	20.9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693	72.9
총합계	9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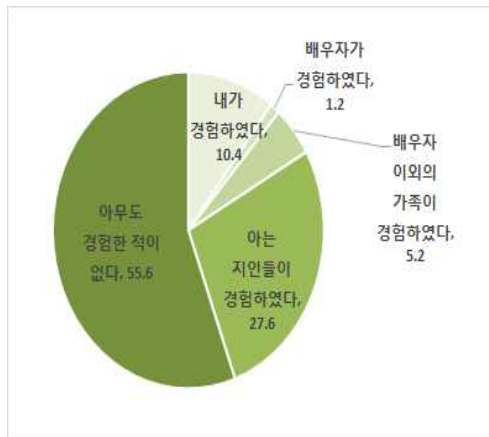


⑦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공정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527명(55.6%),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62명(27.6%), 내가 경험하였다 99명(10.4%),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9명(5.2%),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1명(1.2%)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99	10.4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1	1.2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9	5.2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62	27.6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527	55.6
총합계	9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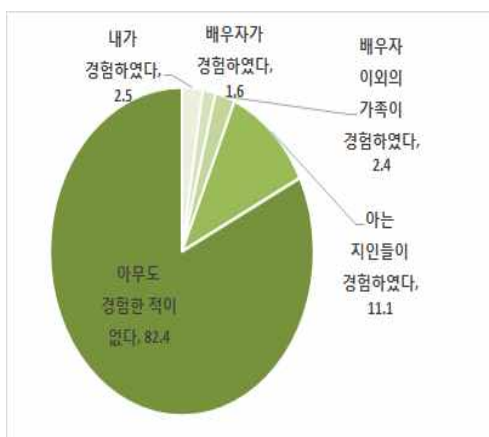


⑧ 성적지향 이유로 불공정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782명(82.4%),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05명(11.1%), 내가 경험하였다 24명(2.5%),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23명(2.4%),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5명(1.6%)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24	2.5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5	1.6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23	2.4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05	11.1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782	82.4
총합계	9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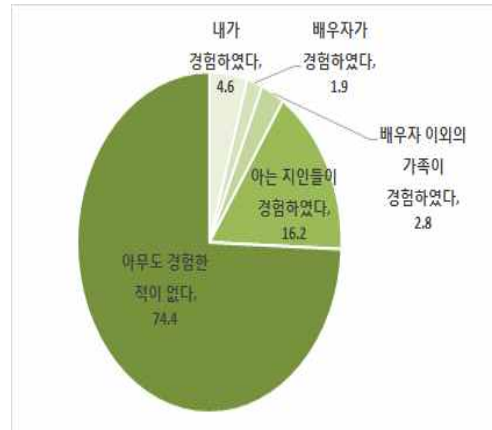


⑨ 종교적 이유로 불공정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705명(74.4%),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54명(16.2%), 내가 경험하였다 44명(4.6%),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27명(2.8%),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8명(1.9%)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44	4.6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8	1.9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27	2.8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154	16.2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705	74.4
총합계	9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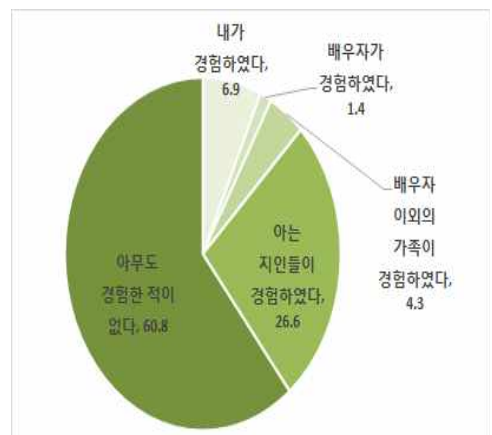


⑩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경험

-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576명(60.8%),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2명(26.6%), 내가 경험하였다 65명(6.9%),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1명(4.3%),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3명(1.4%)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내가 경험하였다	65	6.9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13	1.4
배우자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41	4.3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252	26.6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576	60.8
총합계	9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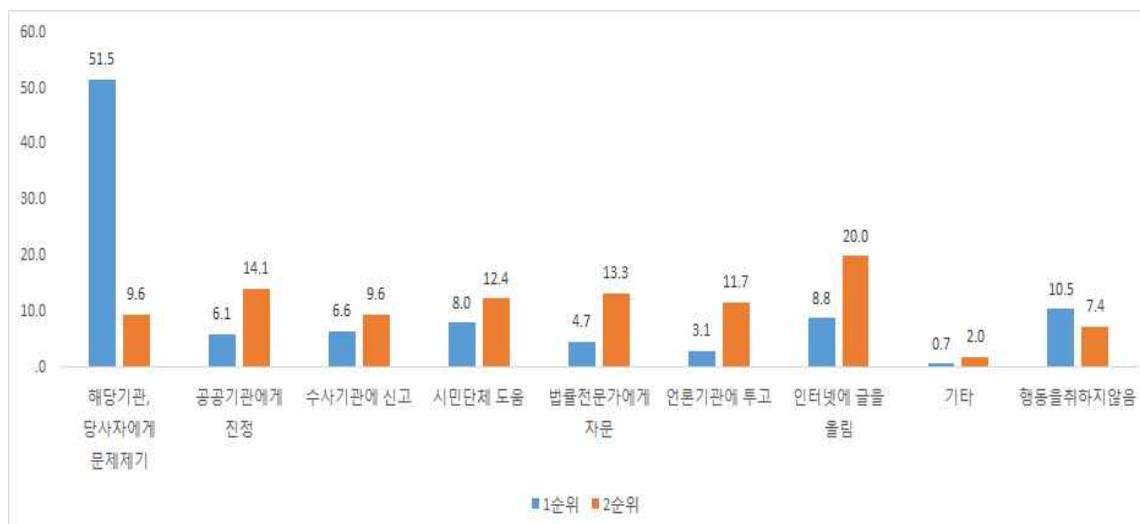


3)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행위

- 1순위로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 제기 501명(51.5%),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102명(10.5%),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86명(8.8%),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78명(8.0%) 순으로 응답함
- 2순위로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179명(20%), 청와대, 충남도청, 시군 등의 공공기관에게 진정한다 126명(14.1%),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119명(13.3%),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111명(12.4%) 순으로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지인들에게 상의한다/침해정도에 따라 다르다/당사자에게 부당함에 대해 상기시키고 만약 부당한 대우가 지속시 법적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당사자에게 항의한다/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했다면 해당기관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걸 알기에 아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한다/행동을 취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시스템이 이 사항을 해결할 역량이 의심스럽고 조직의 논리에 따라 개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지 그런 낙인(오명)이 후유증으로 당사자의 즉 개인의 권리를 오랫동안 구속하지 않는지 등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	501	51.5	86	9.6
청와대, 충남도청, 시군 등의 공공기관에게 진정한다	59	6.1	126	14.1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64	6.6	86	9.6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78	8.0	111	12.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46	4.7	119	13.3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30	3.1	105	11.7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86	8.8	179	20.0
기타	7	0.7	18	2.0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102	10.5	66	7.4
총합계	973	100.0	8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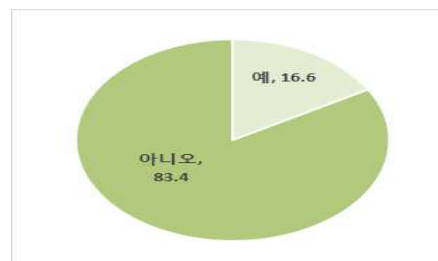
3.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및 행정

1)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1명(16.6%),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69명(83.4%)으로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예	161	16.6
아니오	808	83.4
총합계	969	100.0



① 인권교육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육을 받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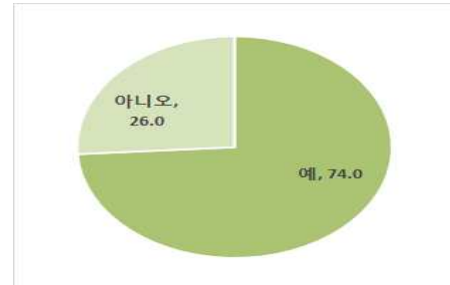
병무청, 단체, 나사렛대학교, 학교, 회사, 경찰서, 안전교육장, 대학교, 가정, 정당교육, 경실련 시민강좌, 시민단체 주관교육,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사회복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새마을연수원, 진흥원, 교육청, 인터넷,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군대,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관할교육기관, 사회, 중앙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청남도, 방송매체, 장애인단체, 자치단체집합교육, 사무실, 평생학습, 월례모임 등

②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의향

-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의향에 대해 “예”라고 669명(74.4%)이 응답하였으며 “아니오”에 235명(26.0%)이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예	669	74.0
아니오	235	26.0
총합계	9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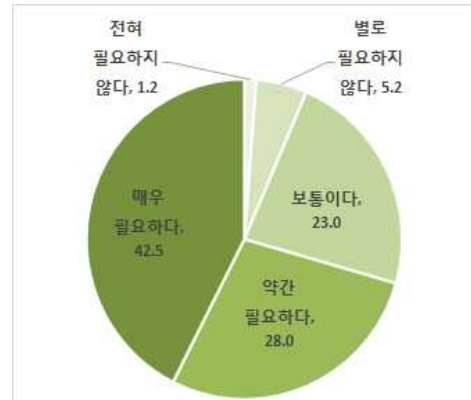


2)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416명(42.5%), 약간 필요하다 274명(28.0%), 보통이다 225명(23.0%), 별로 필요하지 않다 51명(5.2%),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명(1.2%)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51	5.2
보통이다	225	23.0
약간 필요하다	274	28.0
매우 필요하다	416	42.5
총합계	9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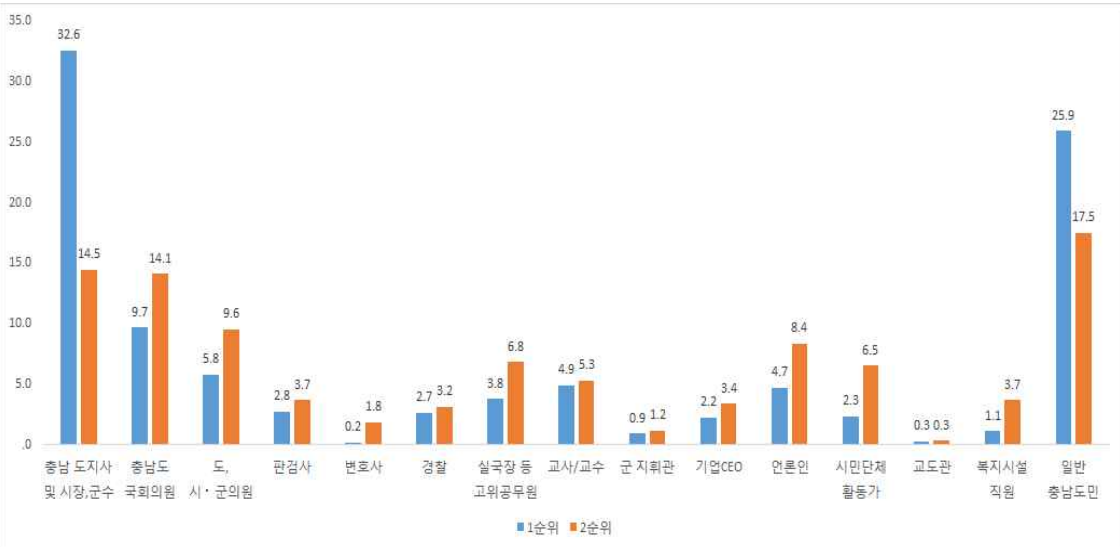


3) 충청남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

- 1순위로 충남 도지사 및 시장,군수 319명(32.6%), 충남도민 254명(25.9%), 충남도 국회의원 95명(9.7%), 도, 시·군의원 57명(5.8%)순으로 응답함
- 2순위로 충남도민 161명(17.5%), 충남 도지사 및 시장,군수 133명(14.5%), 충남도 국회의원 130명(14.1%), 도, 시·군의원 88명(9.6%)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충남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	319	32.6	133	14.5
충남도 국회의원	95	9.7	130	14.1
도, 시·군의원	57	5.8	88	9.6
판검사	27	2.8	34	3.7
변호사	2	0.2	17	1.8
경찰	26	2.7	29	3.2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37	3.8	63	6.8
교사/교수	48	4.9	49	5.3
군 지휘관	9	0.9	11	1.2
기업CEO	22	2.2	31	3.4
언론인	46	4.7	77	8.4
시민단체 활동가	23	2.3	60	6.5
교도관	3	0.3	3	0.3
복지시설 직원	11	1.1	34	3.7
일반 충남도민	254	25.9	161	17.5
총합계	979	100.0	9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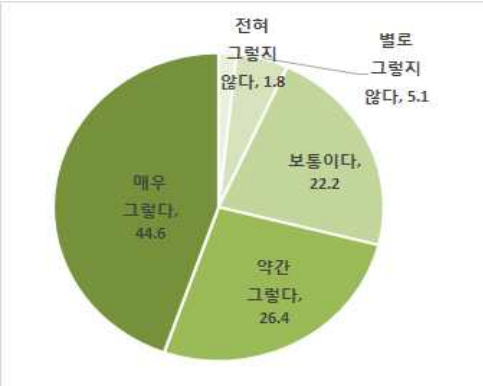
4)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①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실시

-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매우 그렇다 433명(44.6%), 약간 그렇다 256명(26.4%), 보통이다 215명(22.2%), 별로 그렇지 않다 49명(5.1%),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1.8%)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공교육 실시	전혀 그렇지 않다	17	1.8
	별로 그렇지 않다	49	5.1
	보통이다	215	22.2
	약간 그렇다	256	26.4
	매우 그렇다	433	44.6
	총합계	9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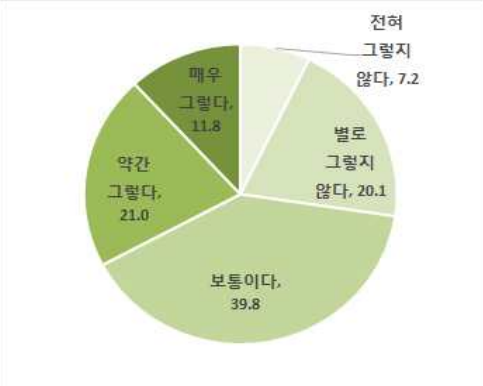


② 인권교육의 시민단체 담당

- 인권교육은 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으로 보통이다 380명(39.8%), 약간 그렇다 200명(21.0%), 별로 그렇지 않다 192명(20.1%), 매우 그렇다 113명(11.8%), 전혀 그렇지 않다 69명(7.2%)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시민단체 담당	전혀 그렇지 않다	69	7.2
	별로 그렇지 않다	192	20.1
	보통이다	380	39.8
	약간 그렇다	200	21.0
	매우 그렇다	113	11.8
	총합계	954	100.0



③ 인권교육의 지방정부 담당

-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으로 보통이다 366명(38.3%), 약간 그렇다 248명(26.0%), 매우 그렇다 175명(18.3%), 별로 그렇지 않다 122명(12.8%),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4.6%)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지방 정부 담당	전혀 그렇지 않다	44	4.6
	별로 그렇지 않다	122	12.8
	보통이다	366	38.3
	약간 그렇다	248	26.0
	매우 그렇다	175	18.3
	총합계	9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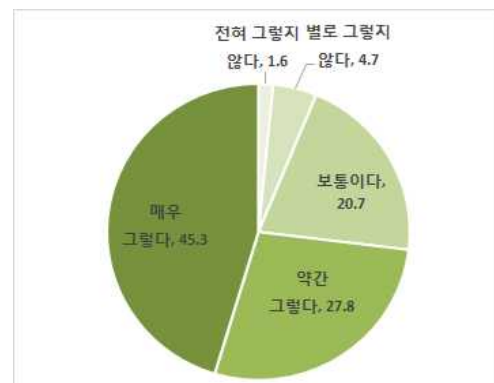


④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 실시

-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는 의견으로 매우 그렇다 436명(45.3%), 약간 그렇다 267명(27.8%), 보통이다 199명(20.7%), 별로 그렇지 않다 45명(4.7%),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6%)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모든 시민 인권 교육	전혀 그렇지 않다	15	1.6
	별로 그렇지 않다	45	4.7
	보통이다	199	20.7
	약간 그렇다	267	27.8
	매우 그렇다	436	45.3
	총합계	9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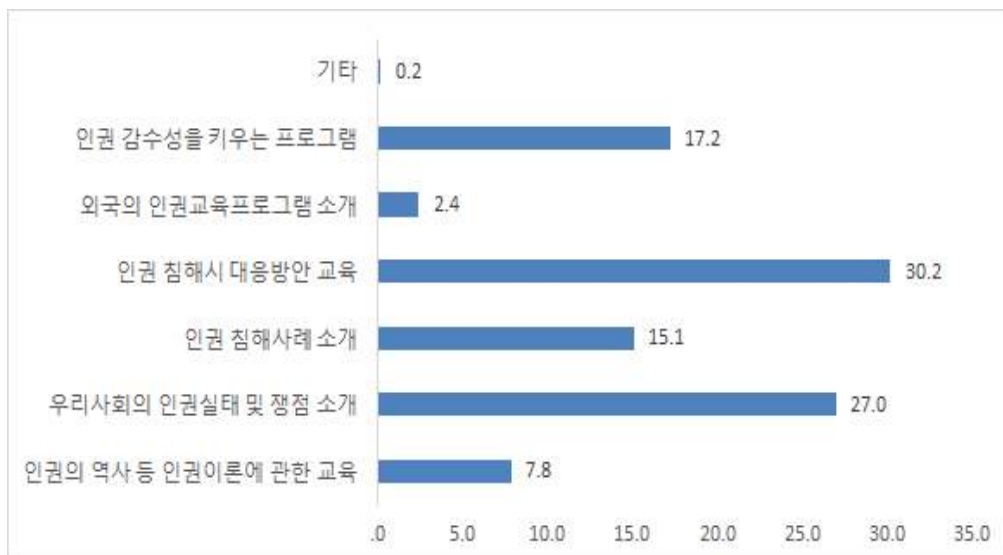


5) 인권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내용

- 인권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인권 침해시 대응방안 교육 296명(30.2%),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265명(27.0%),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169명(17.2%), 인권 침해사례 소개 148명(15.1%),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77명(7.8%), 외국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소개 24명(2.4%), 기타 2명(0.2%)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자긍심을 높이는 취미, 교육 지속 실시/어렸을때부터 인권교육 실시/차별해소 등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77	7.8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265	27.0
인권 침해사례 소개	148	15.1
인권 침해시 대응방안 교육	296	30.2
외국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소개	24	2.4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169	17.2
기타	2	0.2
총합계	981	100.0



4.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권의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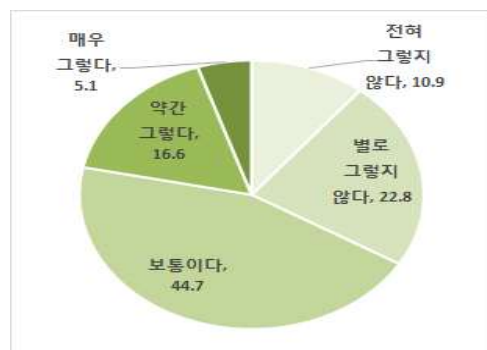
1) 충청남도 인권의식

① 충청남도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 여부

- 충청남도는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도민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하는 등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견으로 보통이다 432명(44.7%), 별로 그렇지 않다 220명(22.8%), 약간 그렇다 161명(16.6%), 전혀 그렇지 않다 105명(10.9%), 매우 그렇다 49명(5.1%)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충남 인권 증진 노력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05	10.9
	별로 그렇지 않다	220	22.8
	보통이다	432	44.7
	약간 그렇다	161	16.6
	매우 그렇다	49	5.1
	총합계	9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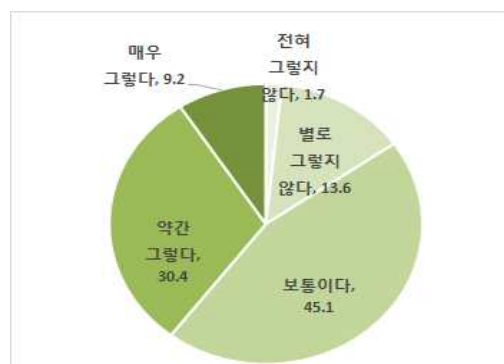


② 충청남도에서의 인권 존중 여부

- 충청남도에서의 인권 존중에 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 437명(45.1%), 약간 그렇다 295명(30.4%), 별로 그렇지 않다 132명(13.6%), 매우 그렇다 89명(9.2%),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1.7%) 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충남 인권 존중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6	1.7
	별로 그렇지 않다	132	13.6
	보통이다	437	45.1
	약간 그렇다	295	30.4
	매우 그렇다	89	9.2
	총합계	9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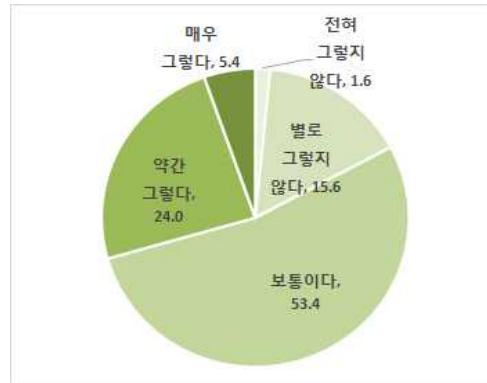


③ 2년에 비해 나아진 충남 인권

- 2년에 비해 충청남도 인권에 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 514명(53.4%), 약간 그렇다 231명(24.0%), 별로 그렇지 않다 150명(15.6%), 매우 그렇다 52명(5.4%),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6%)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충남 인권 향상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5	1.6
	별로 그렇지 않다	150	15.6
	보통이다	514	53.4
	약간 그렇다	231	24.0
	매우 그렇다	52	5.4
	총합계	9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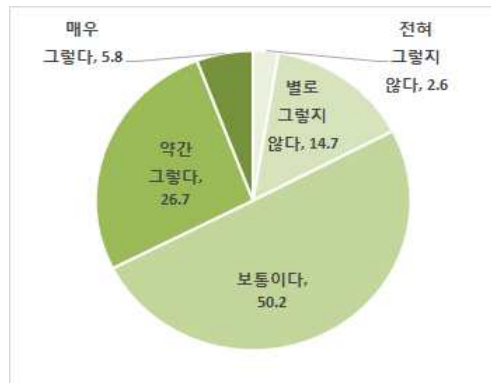


④ 충청남도에서의 인권약자 존중 여부

- 충청남도에서 인권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 484명(50.2%), 약간 그렇다 257명(26.7%), 별로 그렇지 않다 142명(14.7%), 매우 그렇다 56명(5.8%), 전혀 그렇지 않다 25명(2.6%)순으로 응답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충남 인권 약자 존중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25	2.6
	별로 그렇지 않다	142	14.7
	보통이다	484	50.2
	약간 그렇다	257	26.7
	매우 그렇다	56	5.8
	총합계	964	100.0



-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인권의식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인권증진과 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충남도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시사점들이 도출되어짐
-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는 충남의 경제적 여건이 상충되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위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성별, 나이, 학력, 지역에 의한 차별경험 또는 인식도 50%이상 나타나고 있어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지속적이며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도민들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게 홍보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약 17% 수준에 불과한 반면 향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확대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상기관과 단체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함
 - 공교육 과정에 필히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기관과 단체도 함께 검토되어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의 다각화가 필요함
- 충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됨
 - 인권 관련계획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도민이 충남도의 인권정책을 바라보는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짐
 - 인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기에 충남도에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